

데이터의 힘, 과학적 전략으로 선도하는 균형발전

- 14일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 국토모니터링 등 과학적 분석을 활용한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4일(목) 오후 1시 서울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발전과 인구분야 전문가와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을 주제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국토부·지자체·학계·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공간을 분석하고, 주민등록인구보다 인구의 실제 이동과 체류를 반영한 생활인구 바탕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을 밝힐 예정이다.

○ 지역발전 전문가인 중앙대 마강래 교수는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하였을 때 인구감소 방지 효과가 약 2배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마 교수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방에도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A 권역에 연 2.4조(균특회계 예산(22) 연 10조, 권역간 배분 고려) 씩 30년 투자시 인구감소방지 효과 : 분산투자 시 약 39만명 << 거점투자 약 73만명

○ 인구정책 전문가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은 정해진 미래라면서 통근·쇼핑·관광 등 체류에 근거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통해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조 교수는 생활인구를 주요 정책지표로 하여 지방 인구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조할 계획이다.

* 제주, 강릉, 청주, 천안, 목포, 포항 등은 20-30대 생활인구가 정주민구 대비 높게 나타남

** 예. 양산시 거주하면서 부산광역시에서 생활, 김해시 거주하면서 창원시에서 생활 등

- 공간분석 전문가인 국토연구원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를 1km×1km 단위까지 분석해서 지역의 인구·산업거점과 거점 간 상호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특성·기능·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국토 모니터링 활용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국토계획평가 제도*와 연계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 국토계획 수립단계에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상위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하는 제도(국토기본법 제19조의2)

□ 주제 발표 이후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통계개발원 최바울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황명화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국토발전 전략에 대해 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윤의식 국토정책과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 “초광역권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인구·산업 거점과 교통인프라를 시각화한 (가칭)‘국토공간거점지도’를 구축하고,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인구의 유·출입을 볼 수 있는 생활인구 기반의 동태적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적인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발표 내용은 사전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것으로, 변경 가능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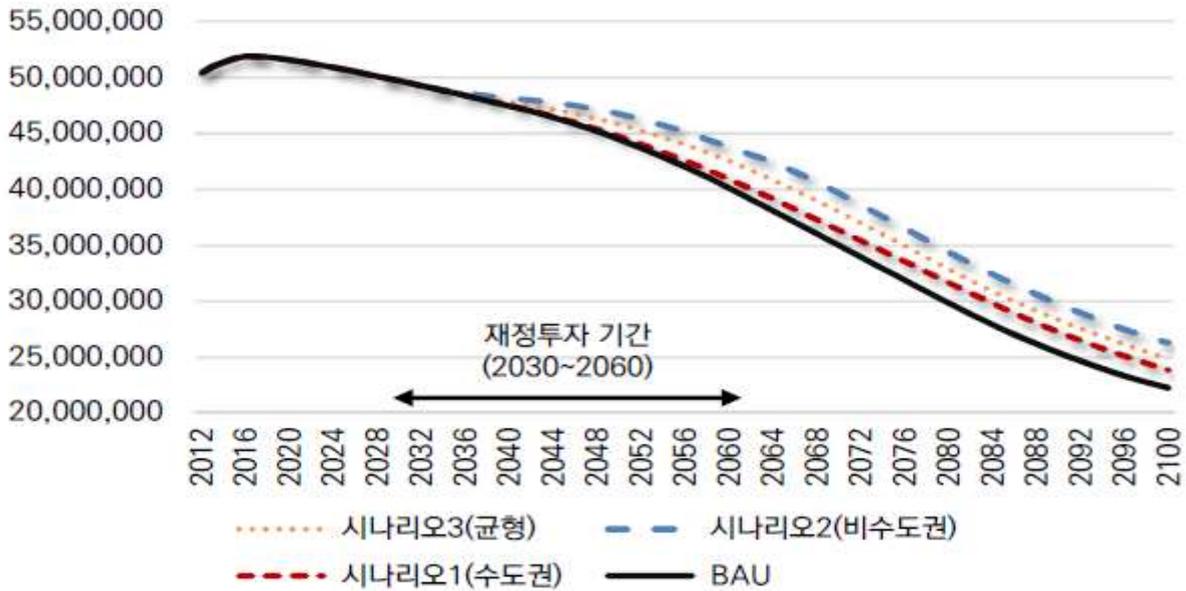
담당 부서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의식 (044-201-3646)
		담당자	서 기 관	김종성 (044-201-4733)
			사 무 관	안윤상 (044-201-4951)
			주 무 관	윤이슬 (044-201-4730)



참고 1

Compact & Network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마강래 교수)

□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투자 효과 분석



* BAU(Business As Usual) : 현재상태 유지(투자 없음)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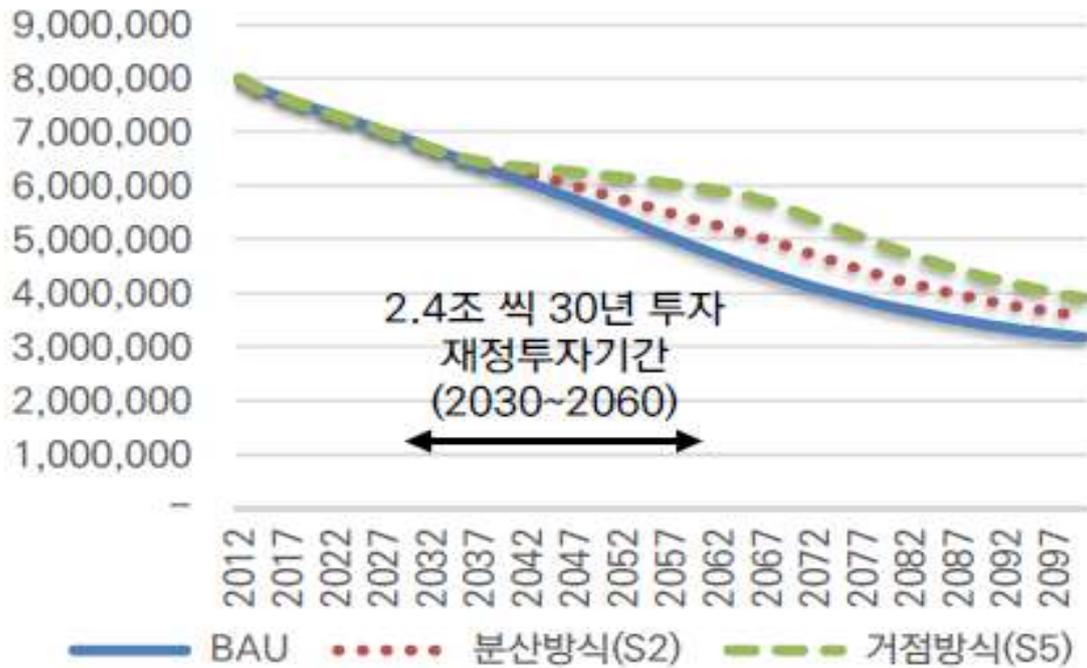
- (현황) 인구추계 상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 2,218만명으로 감소
- (가정) 연간 20조원 씩 30년 동안('30~'60) 시나리오①수도권, 시나리오②지방, 시나리오③수도권·지방 균분 투자했을 때 2100년 예측인구를 비교
- (결과) 시나리오②지방에 투자했을 때 2100년 예측인구가 가장 큼

시나리오	BAU(현행)	①수도권 투자	②지방 투자	③수도권지방 균분
2100년 인구	2,218만명	2,377만명	2,621만명	2,482만명
인구증가 효과	-	159만명 증가	403만명 증가	264만명 증가

- (분석) 비수도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투자 누적금액이 늘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 구축, 일자리 증가 등 집적 효과가 발생
- 수도권은 재정투자로 일자리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가용토지 부족, 주택가격 상승 등 집적 불경제로 조출생률 하락이 발생하여 재정투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거점투자과 분산투자 간 효과 분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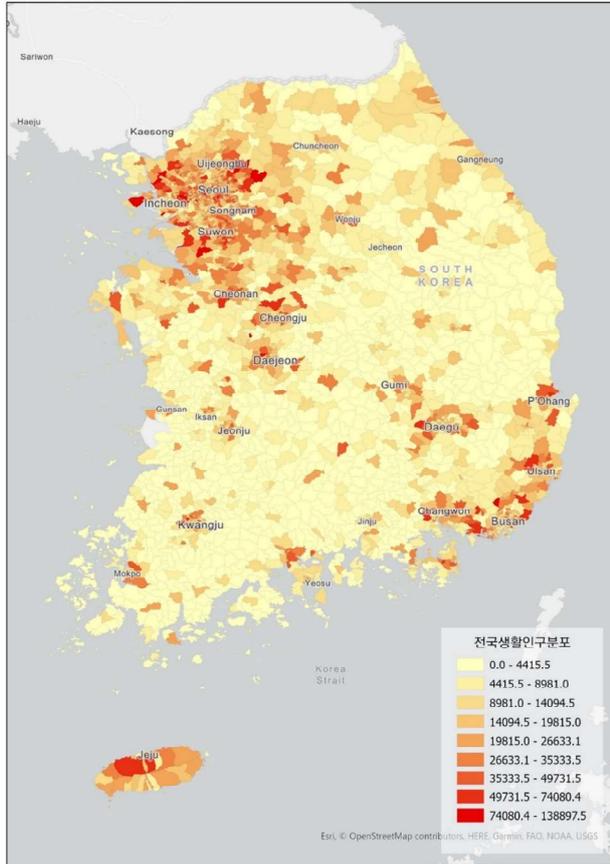
* BAU(Business As Usual) : 현재상태 유지(투자 없음)

- (현황) 추계 상 A 지방 광역권 인구는 2100년 318만명으로 감소
- (가정) 연간 2.4조원* 씩 30년 동안(‘30~’60) **시나리오①** 모든 지자체에 분산 또는 **시나리오②** 거점도시 중심으로 투자 시 2100년 예측인구 비교
 - * ‘22년도 균특회계 예산(10조원)을 지역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을 고려하여 가정
- (결과) **시나리오②** 거점도시 중심으로 투자 시 2100년 예측인구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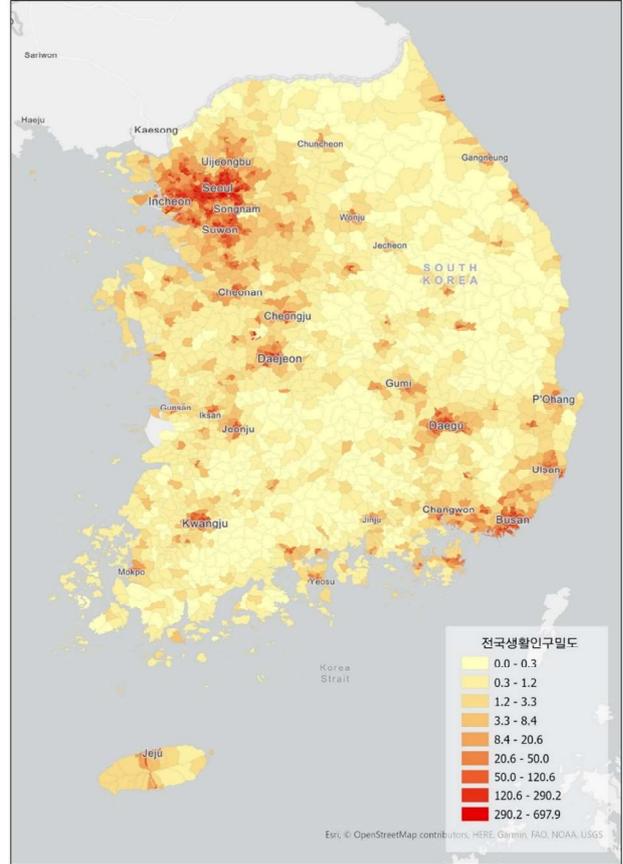
시나리오	BAU(현행)	①분산 투자	②거점 투자
2100년 인구	318만명	357만명	391만명
인구증가 효과	-	39만명 증가	73만명 증가

- (분석) 분산투자보다 거점 투자할 때 ①도로·철도 확장에 따른 교통 편리성 및 접근성 개선 효과로 사업체들이 증가하고, ②지역산업 활성화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전국 행정동 단위 생활인구 분포



(a) 생활인구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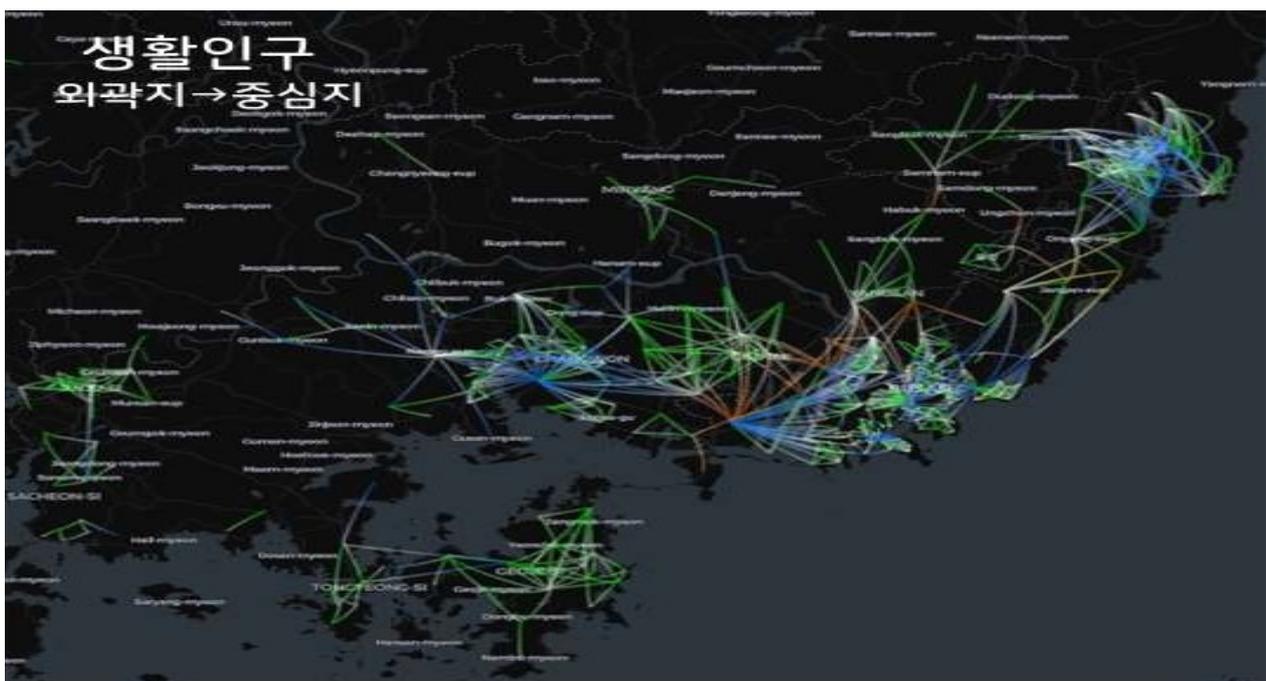
(b) 생활인구밀도(인/km²)

* 붉은색일수록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

- 수도권과 부산 등 광역시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생활인구 분포
 - 수도권은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대전광역시 등 충청권까지 확장
 - 전라권은 군산, 익산, 전주, 광주, 목포, 여수가 생활인구 중심지
 - 영남권은 포항, 울산, 부산, 창원, 대구, 구미, 진주, 거제 등이 중심
 - 강원권은 춘천, 원주, 강릉, 양양 등 중심, 생활인구수는 다소 적음
 - 제주의 생활인구 수는 수도권, 부산 등 대표 생활인구 거점과 유사
- 생활인구 밀도는 생활인구 수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면적이 작은 도심지의 행정동에서 생활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남

□ 부울경권 인구이동 분석

- 전입전출 측면에서는 집값 상승, 직장, 교통수단 확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주민들이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향
- 생활인구 측면에서는 외곽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기존 중심지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외곽지 → 중심지로의 인구이동 패턴이 확인
- 김해 장유신도시 주민은 창원·부산에서, 부산 일광신도시 주민은 울산·양산에서 활동하는 등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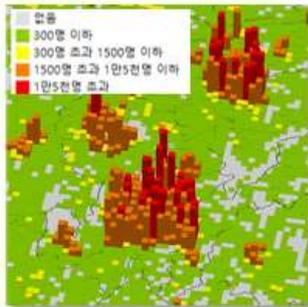
참고 3

Compact & Network 국토전략을 위한 국토모니터링 활용방안(임은선 위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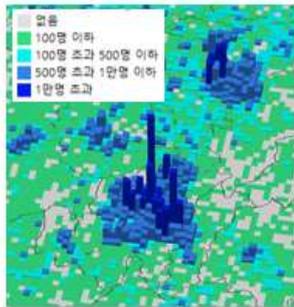
□ 국토공간거점 추출 방법과 기준

▶ 국토공간구조는 전국을 대상으로 1km×1km격자 단위를 기본 규격으로, 통계청, KCB(Korea Credit Bureau),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으로 부터 취득된 자료로 다음의 4가지 지표를 생성하여 분석

▪지표1: 인구집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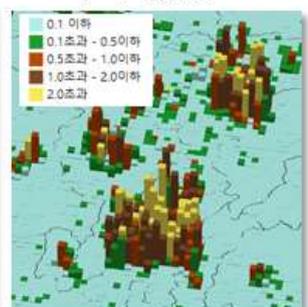
▪지표2: 고용집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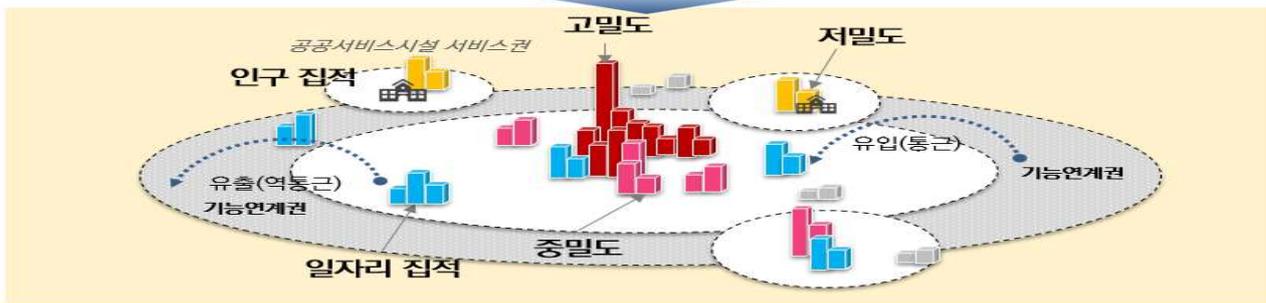
▪지표3: 공공시설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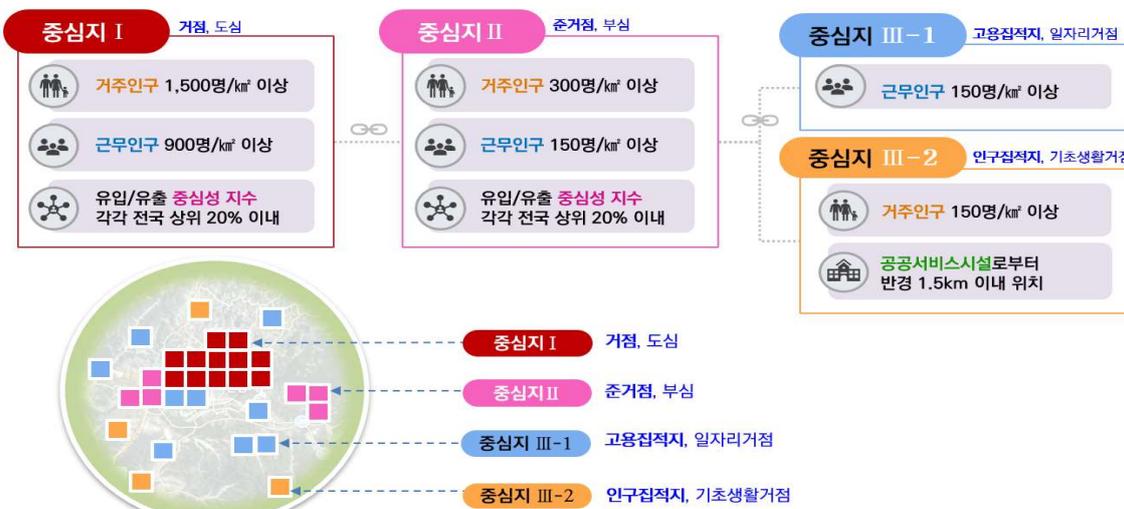
▪지표4: 중심성



- 지표1 : 1km×1km 격자 단위 거주인구(통계청 SGIS 인구, 2021년)
- 지표2 : 1km×1km 격자 단위 근무인구(KCB 직장 주소지 기준 인구, 2021년)
- 지표3 : 공공서비스시설(관공서/보건의료기관/초등학교/경찰서) 접근성
- 지표4 : 중심성 지수(KCB 자택주소-직장주소로 통근 유출입 관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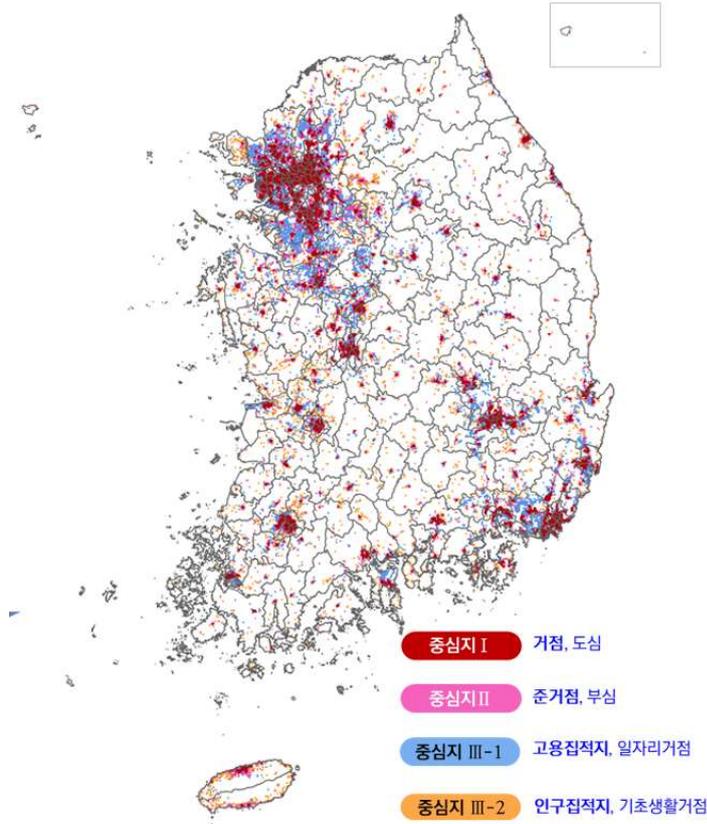


▶ 중심지 구분은 UN의 도시구분 기준을 참조하여 1,500명/km² 수준으로 설정, 도시와 농산어촌의 중심지가 모두 추출될 수 있도록 적용, 도시의 특성에 따라 중심지 구분 기준을 변경할 수 있고, 기능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표를 활용하여 유연적으로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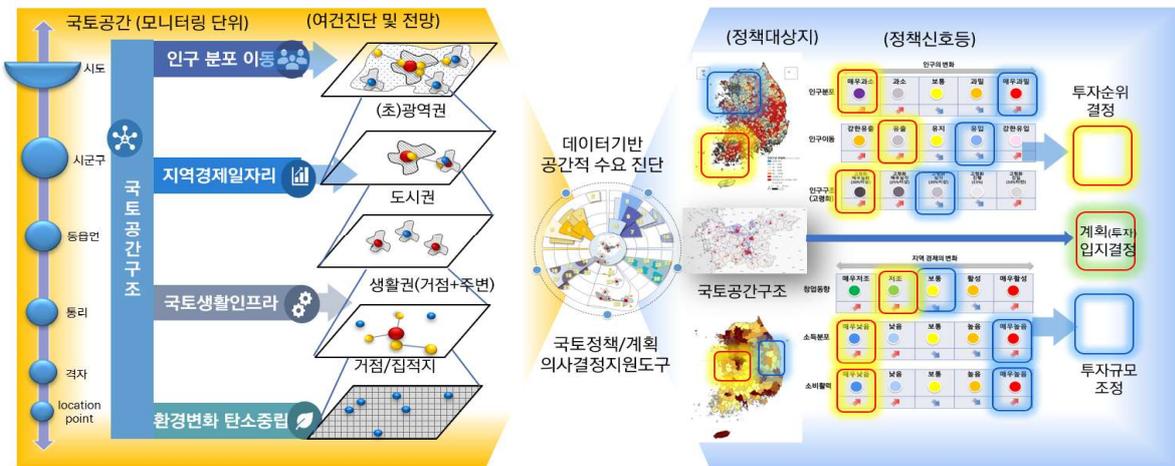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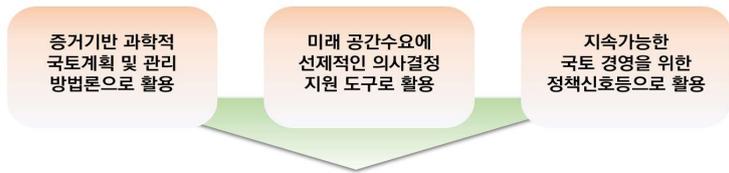


□ 국토공간거점지도의 활용 방향

▶ 국토공간거점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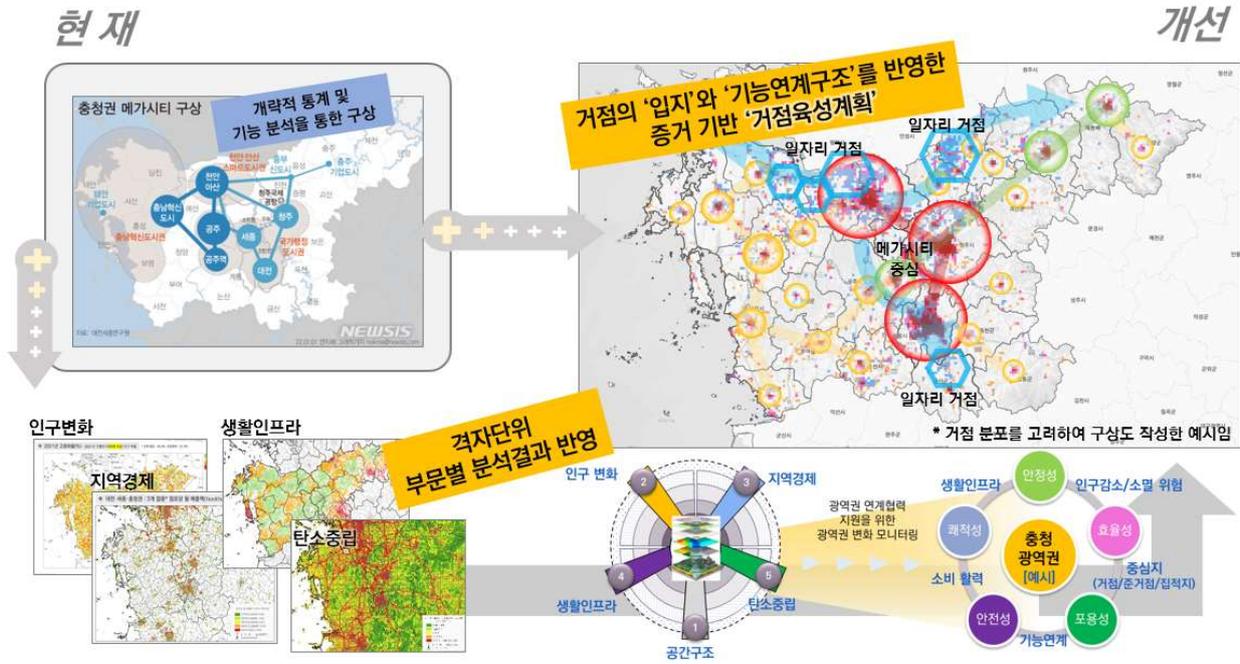


▶ 증거기반 과학적 국토계획 및 관리 방법론으로 활용, 미래 공간수요에 선제적인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 지속가능한 국토 경영을 위한 정책신호등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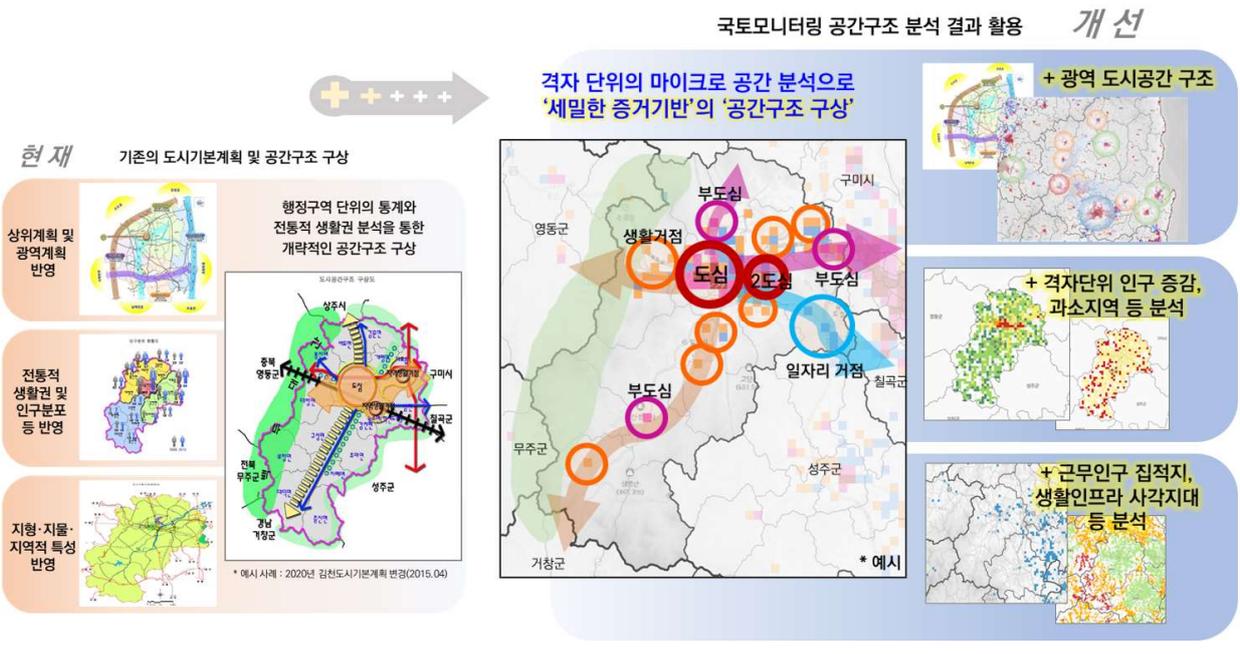
- ▶ 국토공간거점지도를 활용하여 공간구조의 광역적 특징과 관계, 부문별 이슈와 여건을 종합하여 증거 기반의 Compact & Network 광역거점 육성 계획을 수립

〈광역거점 구상 계획 예시〉



- ▶ 인접 시·군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광역 차원에서 연계협력에 효율적인 공간구조 구상, 인구 구조적 특징(인구변화, 고령화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권별 공간전략 수립, 근무인구집적지, 생활인프라 사각지대 분포 등을 파악하여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부문계획 수립에 활용

〈공간구조 구상 등 계획 예시〉



지역균형발전정책포럼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

일 시 2023. 12. 14. (목) 12:30

장 소 상연재 별관 (서울 세종대로 21길 22, 태성빌딩 201호)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KRIHS 국토연구원

프로그램

※ 발표주제 및 발표자 등 프로그램 일정 변동 가능

시간	내용		
12:30-13:00	등록		
13:00-13:20	Compact & Network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 (마강래 중앙대 교수)		
13:20-13:40	생활인구 기반 국토 진단과 지역발전 전략 (조영태 서울대 교수)		
13:40-14:00	Compact & Network 국토전략을 위한 국토모니터링 활용 방안 (임은선 국토연 선임연구원)		
14:00-14:10	휴식		
14:10-15:40	토론		
	좌장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토론자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최바울	동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황명화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15:40-	마무리 및 폐회		